

## 일제강점기 ‘애림(愛林)’ 사상의 선전과 일상 통제\*

박선영\*\*

### 〈국문초록〉

산림은 전통적으로 백성의 일상과 농업생산을 지탱하는 중요 재산이었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임야 이용을 원칙적으로 통제한다는 기초를 수립하고, 산림 ‘보호’ 아래 ‘애림’ 사상을 선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애림’ 사상은 특히 민유림에서 적극적인 식목을 유도하여 치산(治山)을 통한 황폐화 방지를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부락’ 중심의 애림운동으로 확대되었는데,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양하게 하여 당국의 통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기념식수일을 지정하는 등 선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문, 잡지 및 방송을 진행하였다.

총독부의 애림 사상은 일반민의 “단체적 각성”을 촉구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1930년대 들면서 마을 단위로 애림 단체가 조직되면서 총독부의 애림 사상 선전이 더욱 면밀해진다. 이 과정에서 ‘부락’민은 모두 애림 단체의 지도에 ‘동참하게’ 되었고, 통제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애림 단체는 일반민에게 엄격하게 지시하면서 임야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각인시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애림 단체의 지도 사항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역민이 기존의 생활 태도를 부정하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애림 단체는 일상 생활에 균열을 야기했고, 그 통제는 강압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임산물 활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는 것이 늘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때 애림 사상은 각종 비용과 노동력을 ‘자발적으로’ 동원하게 하는 통제 논리에 불과했다.

#### □ 주제어

산림, 삼림, 애림, 기념식수, 애림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HK연구교수

---

## C ontents

1. 머리말
  2. '애림' 사상 선전과 기념 행사
    - 2.1. '애림' 사상의 인식 확산과 '애림운동'
    - 2.2. '기념식수일'에서 '애림주간'으로 확대
  - 3 '애림' 단체와 대민 '관리' 문제
    - 3.1. '애림' 단체의 조직 상황
    - 3.2. 애림계의 지도 사항
    - 3.3. 애림단체의 감시와 일상 통제 사례
  4. 맺음말
- 

### 1. 머리말

전통적으로 산림은 사람들의 일상과 농업생산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었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與民共利)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산림 사점을 철저히 금지해 왔다. 근대 이후 산림은 산업의 주요한 기초 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대대적 '개발'에 착수하였다.<sup>1)</sup>

산림 '개발' 착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울창한 숲이 기본 조건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미 조선 후기부터 산림은 황폐해졌고, 가뭄이나 홍수 빈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졌다. 일제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산림의 공동이용과 임야 소유권 제도의 미비로 인해 황폐화가 가속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일제는 배타적 소유권을 토대로 '공리' 원칙을 제거하고, 산림녹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sup>2)</sup> 이렇게 다수 일반민들은 산림에서 내몰리기 시작했다.

일제 초기 산림정책은 국유림<sup>3)</sup> 조사와 산림육성으로 대표된다. 총독부는 조

- 
- 1) 강영심, 「日帝의 한국산림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2) 최병택, 「조선후기 산림황폐화 현상과 일제 당국자의 산림 문제 인식 검토」, 『역사와 경제』 118, 2021, 67쪽.
  - 3) 조선총독부는 임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우수한 산림은 국유림, 기타 산림은 민유림으로 구분하였다. 민유림은 공유림(公有林), 사유림(私有林), 사유림(寺有林)이 포함된 것이며, 이 중 공유림은 도유림, 부읍면유림, 학교림, 농용림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산림청 편, 『조선임업사(상)』, 산림청, 2000).

림대부제도를 통해 지주 자본가 중심의 산림 소유 및 녹화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유림 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하면서 산림의 소유권을 확정하였다. 이는 향후 민유림에서 재원확보를 기대하고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했다.<sup>4)</sup> 이를 소유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국유림=개발', '민유림=보육'으로 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sup>5)</sup>

총독부는 산림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반인들의 산림 이용을 철저히 규제하였으므로,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조선인의 주요 생활필수품인 신탄(薪炭)의 가격은 1910년대 후반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고,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sup>6)</sup> 실제로 총독부는 1920년대 들면서 연료용 임산물의 생산 구역과 생산량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신탄 유통 구조를 공설 신탄시장의 도소매상 위주로 바꾸면서 신탄 유통을 장악하였다.<sup>7)</sup>

총독부의 산림 '보호'를 위한 통제책은 사실상 조선인의 생존과 괴리되는 비현실적인 조치였다. 산림에서 유리된 조선인들은 생존을 위한 도벌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조선의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sup>8)</sup> 전반적으로 총독부의 산림정책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동떨어진 채로 수립되었음을 시사한다.

총독부는 이 문제를 대중의 자발적 동의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였는데,<sup>9)</sup> 대대적인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에 미친 총독부의 '애림' 사상 선전에 주목하고자 한다. 관련 기존 연구에서

4) 강정원, 「일제의 山林法과 林野調査 연구: 경남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66-67쪽.

5) 최병택, 「일제하 목재 생산 정책의 성격과 그 변화」, 『전북사학』 48, 2016.

6) 임송자, 「식민지 시기 땀감으로서 신탄과 연탄 이용의 변화 과정」, 『史林』 53, 2015, 207-208쪽.

7) 최병택, 「일제강점기 연료용 임산물 생산·유통 통제와 그 변화」, 『대구사학』 119, 2015, 263-271쪽. 독일의 사례를 보면, 18세기 프로이센 정부는 사적인 장작 거래를 제한하면서 국가 목재 독점을 취하였다. 이는 숲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도출하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요하임 라트카우 저·서정일 역, 『나무시대: 숲과 나무의 문화사』, 자연과 생태, 2013, 184-185쪽).

8) 『조선일보』, 1932.12.28, 「山野가 만흔 朝鮮에 山林犯令者 激增」.

9) 근대 권력은 식민정책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확보하고 자발적인 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지배 체계모니를 작동시켰다. 이는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쳐 지배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2004, 25-26쪽).

는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 전반적으로 일반에서 애림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였고, 전시체제가 조립사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애림 사상을 교육하였음을 밝혔다.<sup>10)</sup> 본고에서는 애림 사상 선전은 종래 자유롭게 공유하던 산림에서 배제된 일반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순응’하도록 만드는 기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주목하여 사회교화의 양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총독부의 산림 독점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일반민의 인식 통제에 기대어 추진되었음을 고찰할 예정이다.

조선총독부는 애림 사상 선전을 위해 1911년부터 기념식수일을 정하고, 기념 행사를 적극 활용하였다. 기념행사는 전시체제가 들어 확대되면서 지역 말단까지 홍보되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애림 단체가 마을 단위에 조직되면서 일반민을 적극 지도하고 ‘관리’했기에 지역 내에서 애림 단체의 활동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계는 본래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 공동체였다. 다양한 계들은 시대에 따라 생성, 발전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일제강점기에도 삼림조합, 애림계 등 여러 애림 단체로 ‘재탄생’하였다.<sup>11)</sup> 이때 계 조직은 일제의 정책적 목적과 결합한 형태로 민간 생활 차원에서 일종의 ‘생활개량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애림 단체의 일상 통제 일면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애림’ 사상 선전과 기념 행사

### 2.1. ‘애림’ 사상의 인식 확산과 ‘애림운동’

본래 생활필수품인 목재와 주요 임산물은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는 기초 자원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sup>12)</sup> 그런데 이미 조선의 임야

10) 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계 도입의 배경 및 의미」, 『韓國史研究』 138, 2007; 강정원, 「일제 전시체제가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66, 2018.

11) 해방 이후 산림계의 조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애림계의 조직과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다(최병택, 「해방 직후~1960년대 초 산림계 설립논의의 전개와 그 성격」, 『史學研究』 90, 2008).

12) 朝鮮山林會, 『森林保護講演集』, 1933, 3쪽.

상태는 매우 황폐화된 상태였으며, 총독부는 황폐화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13)</sup>

조선시대 임야는 일부 봉산(封山), 금산(禁山)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주공산으로, 일반 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에 따라 수시로 입산하고, 남벌, 폭채를 마음대로 하면서 삼림의 황폐화를 가속하였다. ... 백성들이 삼림의 광대한 혜택을 나쁘게 이용하는 데 급급했고, 조금도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데는 뜻을 두지 않았다.

총독부는 '조선시대는 전통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무주공산에 자유롭게 입산하면서 규제없이 채취'하다 보니 산림이 황폐해졌다고 인식했다. "삼림의 광대한 혜택"을 백성들이 공유했던 관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지되어 온 관습에 따라 백성들이 '과도하게' 임야를 벌채해왔고, 관에서는 이를 묵인하면서 산림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조선인들에게 그동안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산림 이용을 통제하고,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1920년 당시 조선총독부 니시무라(西村) 식산국장은 임야조사사업을 소개하면서 조선 내 애림 사상의 진일보가 필요하다고 훈시했다.<sup>14)</sup> 그는 앞서 "1910년대 국유림 경영과 민유림 장려를 노력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화재, 도벌, 벌채의 빈발 등 요인을 언급하면서<sup>15)</sup> 앞선 산림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조선인들의 애림 사상의 결여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민간에 애림 사상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당국의 애림 사상은 특히 민유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1921년 개최된 산업조사위원회에서 임업 관련 "민유림야의 조림 특히 황폐한 산야의 복구를 촉구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 결정되었다.<sup>16)</sup> 민유림 내 상당수의 임목이 산업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13) 산림청 편, 앞의 책, 27쪽.

14) 『동아일보』, 1920.05.05., 「道農業技術會에 訓示」.

15) 『동아일보』, 1921.11.27., 「林野政策 林務主任에 對한 殖産局長의 訓示」.

16) 산림청 편, 『조선임업사(하)』, 산림청, 2001, 29-30쪽.

‘치수책(治水策)’으로써 국토 보안, 홍수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림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산림이 황폐해지면 결국 산업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17)</sup>

충북 각 군 임업기술원 및 삼림주사 회의 중 도지사의 훈시 내용에 따르면, “임업은 국가 영원의 대 계획으로써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삼림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성림지(成林地)가 적은 것이 문제”라면서, “결국 임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양묘사업의 진전, 조림의 속진, 삼림보호 철저, 그리고 애림 사상의 보급 함양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였다.<sup>18)</sup> 즉 일반의 애림 사상을 환기하여 양림, 조림의 중요성과 더불어 관련 시설 확충을 설파하였다.<sup>19)</sup> 이를 위해 입산을 엄격히 금지하여 도벌이나 남벌에 대응하였고, 각 도 부·군에서 삼림주사가 단속하도록 하였다.<sup>20)</sup> 다만 1920년대 ‘산림 녹화’는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산림 상태가 호전되는 등의 실제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sup>21)</sup>

1930년대 들면서 총독부는 조선공업화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산림 ‘개발’을 강조하였다. 산업 ‘개발’을 위해 공업용 연료를 활용하여 총독부의 산림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골자였는데, 대표적으로 복선개척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sup>22)</sup> 이에 애림 사상 또한 농촌 경제에 직결될 수 있는 농가 입산물 증산을 강조하는

17) 島田貞吉, 「森林과 治水(上)」, 『朝鮮山林會報』 6, 1926, 12-15쪽.

18) 『매일신보』, 1929.02.01., 「林業은 産業의 大宗 國家永遠의 大計 愛林思想涵養에 努力하라 忠北技術員會 韓知事訓示」; 『매일신보』, 1931.11.29. 「愛林精神의 普及은 아직 前途遼遠 造林과 同時에 保護가 急務 郡林業技術員會議席上 韓知事訓示」.

19) 『매일신보』, 1928.07.06., 「愛林思想을 喚起하야 植林獎勵에 努力하라 慶南府尹郡守會議席上 水口知事訓示 (二)」.

20) 일제로 엄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민과 궁민의 도벌, 남벌 등 목재 채취를 방지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은 농촌을 떠나 산읍으로 가게 되고, 산읍의 농민은 결국 화전민이 되어 산림을 생활 근거지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삼림령 위반에 따른 검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었다(『조선일보』, 1931.12.24., 「森林關係 犯罪 激增 六個月間 六千餘件」).

21) 일제는 산림 녹화를 위한 조림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반 비용은 조선인에게 부담시켰을 뿐이었다. 민유림 정책의 목적은 민유림의 세원화(稅源化)를 통한 통치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되었다(최병택, 앞 논문, 2007).

22) 1930년대 공업화에 유용한 입산물 생산을 위해 조림을 지속하였지만 한편에서 산업 ‘개발’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산림벌채를 하였기에 오히려 극심한 산림 황폐를 초래하는 등 총독부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 가능하다(강정원, 「1930년대 일제의 조선공업화와 산림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79, 2016).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자력갱생'을 표방하는 '애림운동'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 당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피폐해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교화사업과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sup>23)</sup>

1930년대 초, 일반에 산림 '보호'를 각성하는 차원에서 사방사업(砂防事業)이 진행되었다.<sup>24)</sup> 사방사업은 1931년부터 시행된 궁민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사방사업은 '시국 응급시설'로써 인식될 만큼 시의성이 있었다. 당시 총독부 농림국장은 1934년까지 진행된 제1기 사방사업의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농가의 자력갱생을 촉진함에 유의하여 1935년부터 제2기 사방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사방사업은 '민유림지도방침' 보급에 철저하여 산림 이익을 증가시켜 농산 어촌 경제 상황의 개선을 도모해야 함이 주장되었다.<sup>25)</sup> 즉 애림 사상은 근본적으로 '관민일치(官民一致)'에 따른 사회 연대의식을 고양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업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동력을 투입하게 하는 논리가 투영되어 있음을 파악 가능하다.<sup>26)</sup>

한편 산림 '개발'을 명목으로 산림 '보호'를 표방한 총독부는 조선인의 산림 접근을 보다 더 엄중하게 단속하였다. 실제 사유림임에도 소유자가 자유롭게 임

23) 당시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농민의 자력갱생을 우선순위에 두어 생활안정책으로 삼았다. 자력갱생은 '심적(心的) 방면(정신적 측면)'과 '물적(物的) 방면(신체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적 방면으로는 관민일치를 바탕으로 애국심과 사회연대의식을 고양하여 순응형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물적 방면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취하여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주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사회교화사업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92-112쪽).

24) 사방사업은 토지의 붕괴나 토사 유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작하고 식물을 파식하는 것을 말한다(『朝鮮砂防事業令』 1933년 8월 25일 제령 제17호).

25) 渡邊忍, 「民有林指導方針-植民政策の一大轉向」, 『朝鮮』 214, 1933.3, 23~33쪽; 『경성일보』, 1935.04.27., 「愛林思想の昂張と殖林事業の進捗を圖れ(中); 道林務主任官會同に於ける矢島農林局長の演示」.

26) 총독부는 궁민구제의 목적과 결합하여 생활안정책으로써 사방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였지만, 사업 수행 비용 중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고, 노동력은 부역으로 지역민들이 동원되어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36.08.03., 「榮州砂防賦役延人員 六萬」). 당시 부역 문제는 지역민들에게 사실상 '강요'되면서 거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공공비용'의 부담이 지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생활이 피폐해지는 요인이었다는 특징이 있다(박선영, 「1920~30년대 세궁민 생활상태조사와 구조 없는 구제 -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6(4), 2023).

산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채취 활동 또한 제한되었다.<sup>27)</sup> 또한 산림 접근이 원천적으로 통제됨에 따라 농가 연료 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워 농가 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남벌 엄금 정책에 변화를 주어 임산물의 유용가치의 제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다.<sup>28)</sup> 1935년 농용임지 설치가 대표적이다. 연료, 사료, 비료 즉 농용 임산물의 공급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총독부는 임야 소유 농가를 비롯하여 임야를 소유하지 못한 세민(細民)도 농용 임산물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을 선전하였다.<sup>29)</sup> 아울러 총독부는 산림 미소유자 100만 호의 조선 농가에 1호당 1정보의 산림을 경영케 할 계획임을 밝히고, 연료, 비료 등 자급자족을 행하는 동시에 애림 사상을 보급하겠다는 목적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sup>30)</sup> 후술하겠지만 농용임지의 통제는 ‘산림 관리’라는 명목 하에 더욱 치밀하게 통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도벌이나 남벌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림령 위반 범죄도 해마다 격증하는 실상이었다.<sup>31)</sup>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전시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군수물자 및 생산확충 자재용 목재확보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 공급이 한 층 주목되었다. 산림은 방공 상으로 효용성이 있었고,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식량 증산, 조선(造船)을 위한 목재 공출의 목적이 더해졌기 때문에<sup>32)</sup> 국유림뿐만 아니라 민유림에서도 무차별한 과벌이 이루어졌다. 총독부 차원에서의 산림 남벌은 용인되었지만 그 외 산림 채취는 금지되는 목재통제 이원적 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sup>33)</sup> 산림 채취 엄금은 농가의 연료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신탄은 조선인

27) 『매일신보』, 1933.08.12., 「忠南道施設 營林; 營農에 必須事項 (三)」.

28) 『매일신보』, 1933.10.12., 「私有林伐採制限」.

29) 산림청 편, 앞의 책, 2001, 37쪽. 농용임지 설치 경영은 각 ‘부락’에 조직된 ‘애림계’에서 지도하여 경영하도록 하였고, 애림계는 삼림 관리를 표방하면서 적극 통제를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다.

30) 『조선일보』, 1935.03.08., 「農用林地設定」.

31) 『조선일보』, 1934.07.07., 「溫突 朝鮮의 懊惱」; 『동아일보』, 1935.12.18., 「年復年 激增의 森林令 違反」; 『조선일보』, 1938.04.21., 「森林犯罪激增」.

32) 『매일신보』, 1943.03.22., 「造林計畫과 綠化運動」.

33) 강영십, 「日帝시기 戰時(1937년~1945년) 林政하에서의 삼림수탈」, 『한국사연구』 102, 1998, 275-282쪽.

의 주 연료였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었다. 연료는 총독부의 전쟁 수급 물자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신탄 사용을 억제해 나갔으며, 조선인은 생존을 위한 도벌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sup>34)</sup>

총독부의 산림 이용 통제 효과가 미비한 상태에서 애림운동에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조선총독부 유무라(湯村) 농림국장은 국책 상 민유림의 조림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한 용재림 조성과 '부락' 중심의 애림운동을 강조하였다.<sup>35)</sup> 후술하겠지만 총독부는 관과 민의 중간 매개자인 '애림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락' 중심의 단체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양하게 하여 당국의 통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기념식수일'에서 '애림주간'으로 확대

총독부는 조선인의 자각심이 결여되어 애림 사상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환기를 강조하였다. 이에 총독부는 '신무천황제일(神武天皇祭日)' 당일인 4월 3일에 기념식수를 공식화하며 산림 '보호' 및 치산사업의 중요성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기념식수는 "한일병합 직후인 1911년 4월 3일 제1회로 개최된 이래 조선 임야개량 상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관민이 함께하는 애림 사상 양성이 필요하기에 특히 관공리가 솔선 수행하여 조선인을 지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도한 것이었다.<sup>36)</sup>

기념식수는 전국 13개의 도에서 일제히 산야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독부는 1929년 기준, '과거 18회의 기념식수 행사에서 심은 나무는 총 3억 수를 웃돈다'고 밝히면서 기념식수의 성과를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애림 사상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조선 '녹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37)</sup> 기념식수에 앞서 총독부는 신문, 잡지 및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각 관

34) 임송자, 앞 논문, 206-213쪽.

35) 『조선일보』, 1938.05.31., 「山林課長會議 卅日부터 六日間」.

36) 近野英吉, 「併合記念植樹の發端と楡垣長官」, 『朝鮮林業逸誌』, 1933, 232-233쪽. 1911년의 '신무천황제일'은 한일병합 후 첫 번째 제일(祭日)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기념식수의 중요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7) 『매일신보』, 1930.03.28., 「年年旺盛하여가는 朝鮮의 綠化運動 四月三日을 期하여 楊平郡에서 總督府의 記念植樹」; 『경성일보』, 1933.04.02., 「三日は記念植樹日: 『滿目荒涼無一青も夢』と化し; 年年盛んな愛林運動」.

공리, 학교 직원 및 학생, 헌병, 경찰관, 면·동·리장, 금융조합원, 지방농림업 독자자 등을 동원하여 실행하였다.<sup>38)</sup>

1930년대 들면서 총독부의 산림정책의 기조에 따라 기념식수의 성격은 산림 ‘보호’ 뿐만 아니라 임산물인 연료 소비 절약의 의미가 더해졌다. 총독부는 농촌 진흥 대세에 따라 농가의 부수입을 올리고, 대체 식량으로써 과수 재배를 장려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효과를 재차 역설하였다.<sup>39)</sup> 특히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이 참여하여 국민의 협동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키 총독은 ‘기념식수의 모범을 보이겠다’면서 도시와 시골을 구별하지 않고, 각 도, 군, 면, ‘부락’ 단위까지 거행하도록 하였다. 지역 말단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산림 이용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임업지도 시설 증진을 촉구하였다.<sup>40)</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총독부는 지역유력자층 뿐만 아니라 일반 민을 총동원하여 나무를 심도록 유도하였다. 일례로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기념식수 당일, 경찰서원을 총동원해서 묘목을 분배하여 각 호의 담 주위에 심도록 하였다.<sup>41)</sup> 이때 애림 사상은 “치산치심(治山治心)의 근본”이라는 표어를 걸고 기념식수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념식수의 보편화를 통해 ‘국민적 애림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sup>42)</sup> 기념식수 당일 행사는 나무를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산림회 주최로 산림문화전, 임산품 진열 및 판매회도 진행되었고, 방송국에서는 라디오 방송으로 애림 사상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의 강연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sup>43)</sup>

이 당시 기념식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선전한 이유는 조선인에 대한 산림 접근 통제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우기키 총독은 “소위 불안정을 욕망하고 있는 도당(徒黨)이 정국의 불안을 제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며

38) 齊藤音作, 「世界的に賞讃される朝鮮記念植樹の創設事情」, 『朝鮮林業逸誌』 1933, 223, 226쪽.

39) 『매일신보』, 1930.03.28, 「年年旺盛하여가는 朝鮮의 綠化運動 四月三日을 期하여 楊平郡에서 總督府의 紀念植樹」.

40) 『경성일보』, 1935.04.03, 「記念植樹を迎へ; 愛林思想涵養を強調」.

41) 『경성일보』, 1933.04.01, 「楊州の綠化運動; 愛林思想普及」.

42) 『매일신보』, 1933.04.03, 「『愛林思想の向上은 治山治心の 根本』 渡邊農林局長 談」.

43) 『조선신문』, 1935.03.09, 「朝鮮全道を打つて一丸; 愛林運動を起す; 來るべき植樹記念日を期し大的綠化への行進」.

조선의 사회문제로 거론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봄이 되어 매일 경성 주위의 산을 도보하거나 말을 타고 돌아다녔는데 언제나 유쾌하지 않게 느낀 점이 있었고, 그것은 식수나 사방공사가 되어 있는 곳에 철책, 철조망으로 둘러 쌓아 놓은 것”이라며 “일반의 공덕심과 애림 사상 결핍이 불경제적 거북스런 시설을 요하게 한 것인 즉 치산은 치심으로부터라는 의의의 심장한 것을 통감한다”<sup>44)</sup>라고 하였다. 총독부는 나무 주위에 철제 울타리를 치면서까지 조선인의 산림 접근을 엄금했지만 조선인의 저항은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애림 사상의 보급이 사실상 무의미했다고 인식되었기에 선전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었다.

1936년을 기점으로 충청도에서는 애림주간으로 확대하면서 1주일 간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표면적 목적은 산불, 남벌, 도벌 등 산림피해 방지와 동시에 애림 사상을 보급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4월 3일부터 1주일간 도내 전반에 걸쳐 애림운동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군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강화회, 각 읍 면 애림계원을 대상으로 한 임업강화나 좌담회, 선전 포스터 배포, 각 학교림의 조림, 청년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식수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다.<sup>45)</sup> 충북 도지사는 애림 사상을 ‘국가발전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애림주간을 공식화하였고, 비상 시국에 산림자원 확보는 ‘무엇보다 국책에 순응하는 것’이기에 지역민의 협조가 절실함을 설교하였다.<sup>46)</sup>

전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도에서도 애림주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애림 사상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강원도에서는 1939년 매년 봄, 가을에 애림주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애림 사상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애림 관념이 지극히 박약한 농촌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조림의 중요성을 알려 임산물 생산을 증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up>47)</sup> 함북에서도 애림주간을 설정하고, 학교 학생을 동원하여 부유림 녹화와 산림 피해 방지에 철저

44) 『동아일보』, 1934.03.29., 「宇垣總督時事談」.

45) 『경성일보』, 1936.01.18., 「忠北愛林週間今春から實施」.

46) 『경성일보』, 1939.03.16., 「愛林強調週間; 忠北道の新しい試み」; 『경성일보』, 1939.04.06., 「立派な森林は國家進展の基礎; 愛林強調週間の實施に際し金東勳忠北知事談」.

47) 『조선일보』, 1939.09.10., 「愛林週間을 設定」; 『부산일보』, 1939.09.11., 「봄가을의 적기에 애림[愛林] 주간을 설치하다 ; 강원도의 삼림보호책」.

하도록 애림 사상을 환기시키겠다고 하였다.<sup>48)</sup>

1940년부터는 전 조선에서 애림주간을 설정하는 등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총동원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식수는 보국이다”라는 표제를 걸고 국민을 동원하여 행사에 동참시켰다.<sup>49)</sup> 이때 애림주간은 정동연맹의 주도로 시행했는데, 전국의 애국반을 동원하여 각 지방 실정에 따라 ‘애림실천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총독부는 조선 임업 ‘개발’에 대해 관과 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조림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국반을 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sup>50)</sup>

애림주간 당시 정동연맹의 주도 하에 500만 명의 애국반원을 동원하여, 농용 임지에 나무를 심고, 속성림을 만들어 ‘부락’을 녹화하는 대규모 애림운동이 시행되었다.<sup>51)</sup> 애림운동은 모든 애국반원을 총동원하여 도시나 농촌, 공장이나 각종 연맹까지 식수의 의미를 각인하고 철저히 수행하도록 강조하는 선전 행사였다.<sup>52)</sup>

전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물자와 식량, 목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를 애림주간에 적극적으로 표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식량 대책으로 지역민을 동원하여 공한지에서 호두, 밤, 대추 등의 과실나무를 심도록 하였고,<sup>53)</sup> 부족한 목재를 증산하기 위한 ‘대동아건설 조림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총독부 농림국은 ‘애림운동독려대(愛林運動督勵隊)’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애림운동독려대는 삼림 관련 과장과 기사를 중심으로 애림주간 동안 각 도를 순회하면서 지역 내 애림주간 실천 상황을 시찰하고 애림 사상을 독려하는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4)</sup> 이처럼 총독부의 애림 사상 선전은 실질적으로 총독부의 경제적 효용성 제고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선인들의 사상적 통제에서 기반되었다.

48) 『매일신보』, 1939.10.07., 「咸北의 愛林週間 林道; 砂防施設; 公園 等 補修 來 十六日 부터 實施」; 『조선신문』, 1939.10.20., 「淸津의 愛林週間; 府內의 各學校 生徒 動員」.

49) 『매일신보』, 1940.03.26., 「四月三日 中心 愛林週間實施!-全鮮山野綠化를 目標로 植樹報國運動 展開」.

50) 강정원, 「일제 전시체제기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의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66, 2018, 150-151쪽.

51) 『동아일보』, 1940.04.03., 「全朝鮮에 愛林週間」; 『조선일보』, 1940.04.06., 「愛林週間」.

52) 『경성일보』, 1941.03.25., 「植樹의 徹底; 愛林強調週間의 心得」.

53) 『매일신보』, 1941.04.03., 「愛林綠化에 總動員 明日은 三十一回의 植木日 記念日」.

54) 『매일신보』, 1943.04.02., 「木材增産에 總力戰 愛林運動督勵隊를 各道에 派遣」.

### 3. ‘애림’ 단체와 대민 ‘관리’ 문제

#### 3.1. ‘애림’ 단체의 조직 상황

총독부의 애림 사상은 일반민의 “단체적 각성”을 촉구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민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했다. 이에 일찍이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한 자치조직의 전통을 활용하여 삼림조합 결성이 장려되었다. 이로써 삼림조합은 관과 유착한 관제조직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총독부는 삼림조합을 통해 산림보호의 목적을 일반에 보급하고,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삼림조합은 과도한 조합비 책정으로 인한 부당징수와 지나친 산림 단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1933년을 전후로 해체되는 수순에 이르렀다.<sup>55)</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국민 생활 안정 도모’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방공사, 농용림 설정 등 각종 임업사업을 발흥시키는 목적으로 애림 사상이 선전되었고, 기념행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3년 해체된 삼림조합을 대신하여 총독부의 지휘 아래에서 일반민에게 임업 지도와 산림 관리를 하는 ‘충실한 실행자’가 필요했다. ‘부락’ 중심으로 조직된 ‘애림계(愛林契)’와 농촌진흥회의 ‘애림부(愛林部)’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약(洞約), 치산계(治山契), 단연회(斷煙會) 등도 있었다.<sup>56)</sup> 본고에서는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되었던 애림계와 애림부를 중심으로 애림 단체의 조직 상황을 살펴보겠다.

애림계는 면, 리 단위에서 ‘부락’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당시 임업지도는 ‘부락’의 단체적 각성, 즉 지역민의 자각과 협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적

55) 강영심, 「일제의 森林組合 결성과 한국인의 저항」, 『한국근현대사연구』 8, 1998. 일례로, 장성 삼림조합 山監(산림감시원) 5인이 지나가던 나무장사를 붙잡아 취조하였는데, 당사자가 공포심에 질려 대답을 회피하자 이를 도벌했다고 하면서 압수한다고 위협하였던 사례가 있다(『조선일보』, 1930.05.13., 「森林員不當取締」). 삼림조합에 대한 반감이 심각해졌던 일면을 확인 가능하다.

56) 『매일신보』, 1930.01.10., 「愛林思想鼓吹 寧邊郡新泉洞」; 『매일신보』, 1932.09.28., 「伊川上下里斷煙會成績 共同林野買入」; 『조선신문』, 1934.10.23., 「平安南道: 講話會や映畫會等を開催; 愛林思想鼓吹のため山林課大童の宣傳」.

에서 이루어졌다.<sup>57)</sup> 농촌의 위기 속 ‘자력갱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히 종래 계의 ‘자급자족적’, ‘상호부조적’ 성격은 ‘부락’ 내 지역민들 모두의 이점으로 이해시키는 데 적합하였다.

애림계는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각 지역 말단에 조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군은 1931년 제1회 애림계장 회의를 주최했으며, 전남도는 각 리를 단위로 애림계 조직을 적극 장려하여 1934년 해당 조직이 741개에 달한다는 상황을 언급했다.<sup>58)</sup> 특히 충북도는 지리적 특성 상 해안이 없어 임산에 전력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애림계를 조직, 운영하는 양상을 보였다.<sup>59)</sup> 삼림주사는 애림계를 조직한 동리를 중심으로 영역을 제한하면서 애림계원에게만 입산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조직된 동리에 애림계 설치의 명분을 선전하면서 확대시켜 나갔다.<sup>60)</sup>

1934년 전북도에서는 각 ‘부락’ 애림계를 조직하면서 “민유림을 계원 일동이 보호함에 따라 임산물의 증가를 도모하고, 이윤 분배로 미산림소유자의 연료와 비료 문제의 완화를 도모하여 애림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61)</sup> 충북도 역시 농가 필수품인 연료, 비료, 사료의 증진을 촉구하기 위해 각 ‘부락’마다 농용임야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애림계 계원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농용임지 설정 계획을 세웠다. 1934년 당시 도내 1,500여 개의 애림

57) 忠淸北道淸州郡廳 編, 『愛林之泉』, 1938, 2쪽. 계 조직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민을 매개 하는 ‘중간단체’로서 향촌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온 역사가 있고, 식민지 시기 규율 권력의 침투, 지방행정기능 강화에 따라 3가지 성격으로 구분 가능하다. ① 농회, 조합 등 각종 단체·조직으로 흡수·재편, ② 족계(族契), 촌계(村契), 송계(松契) 등 총독부 공적 기능으로 흡수되지 않고 존속, ③ 앞 2가지의 중간 형태로 촌락민의 자치기구로 남아있다가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에 들어 관변조직으로 흡수이다(정승진, 「과시즘적 동원체제가 낳은 식민지 조합제도 - 조선(朝鮮) 계(契)와 회사(會社) 사이에서」, 『大東文化研究』 96, 2016, 151쪽). 애림계는 ③의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58) 『부산일보』, 1931.09.06., 「순천군 첫 회 愛林의 계장[稷長]회의」; 『조선신문』, 1933.04.19., 「全羅南道; 愛臨嶺의 發達一年に二百組」; 『매일신보』, 1933.08.01., 「淸州郡의 林業指導村設置 溫突改善燃料節約 年度內에 實施」; 『동아일보』, 1934.01.24., 「全南 愛林 稷 七百四十個所」.

59) 『매일신보』, 1933.10.13., 「九十五個面에 六百餘愛林稷 海産이 업스니 林産에 注力하자 忠北의 森林愛護機關」.

60) 『동아일보』 1932.12.17., 「樵夫入山禁止 面民重大問題」.

61) 『매일신보』, 1934.05.29., 「山林업는 農家에 面有林을 開放 低廉한 價格으로 採取케 해 全北燃料解決方策」.

계를 총동원하여 지도기관으로 삼고, 1934년부터 1943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sup>62)</sup>

이렇듯 관은 지역의 임업 지도를 전적으로 애림계에 일임하였고, 애림계는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애림계는 관의 지도를 받은 후, '부락'에 돌아가서 구체적 사항을 실행하도록 관리하였다. 일례로 충북 청주군에서는 군수가 매년 봄, 가을에 각 계장을 소집하여 계 사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실정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치게 했으며, 계 지도는 군 삼림주임이 주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수와 군 삼림주사는 매월 1회 이상, 담당구역 내 관계 읍·면 및 경찰 관주재소와 계 운용 상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지방삼림주사와 지방삼림주사보의 지도 상황 및 계의 활동 상황을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애림계장은 군, 읍, 면 기타 관공서의 '지휘 명령을 존중'하여 일반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다.<sup>63)</sup>

애림계는 농가 필수품 증산 계획에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부락'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관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각 '부락'에서 운영되던 애림계는 면 단위에 '애림계연합회'가 설치되면서 애림계 간의 결속력이 생겼고, 한층 관제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충북 청주군 옥산면에서 전 조선 최초로 애림계연합회를 조직하였고, 애림계연합회 설치 이후 엄정한 임야 단속이 시행되면서 효과가 있었다는 자체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sup>64)</sup>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애림계와 더불어 농촌진흥회 애림부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전쟁 물자 수급과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에 애림단체 결성 및 조직이 급증하기 시작했다.<sup>65)</sup> 본래 임야 관련 업무는 농촌진흥회의 식산부(殖産部)에서 일반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임야보호단체 사업을 애림부로 단독 분리시키면서 임야 '보호'의 중요성이 재차 선전되었

62) 『매일신보』, 1934.09.03., 「農畜과 呼應施設」.

63) 忠淸北道淸州郡廳 編, 앞의 책, 33-36쪽.

64) 그동안 애림계는 도별, 남별 금지 목적의 임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는데, 애림계장과 부계장이 같은 동리민인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점에서 '부락' 단위의 계를 통합할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경성일보』, 1936.03.20., 「愛林契聯合會 玉山に設立; 取締を徹底」).

65) 『매일신보』, 1938.06.01., 「各農山村振興會에 愛林部新設기로 決定 京畿의 林野保護方針」.

던 것이다.<sup>66)</sup> 애림부 임야보호사업은 산림 녹화와 임야 단속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방보호계, 임야보호단체를 각각 조직하고, 진흥회원을 동원하여 일반 농가에 애림 정신을 철저히 보급시켜 나갔다.

### 3.2. 애림계의 지도 사항

삼림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애림계의 특성은 ‘부락’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면서 공동 의식을 고양시켜 ‘부락’민의 자발적인 연대 의식을 추동하였다는 점이다. 애림계는 해당 계의 지역에 거주하는 호주(戶主)가 계원이었기 때문에<sup>67)</sup> 삼림조합보다 훨씬 강제성이 짙었다. 이렇게 ‘부락’ 민은 모두 계원이 되어 애림계의 통제를 받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었다.

계원을 통솔할 역원은 계장, 부계장, 간사, 조장(組長), 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계장·부계장은 군수가 임면, 간사·조장은 계장이 임면, 고문은 읍면장 및 해당 면의 경찰관 주재소 수석 경찰관, 특히 명망 있는 민간유력자를 추대하였다. 각 역원의 역할을 보면, 계장은 계를 대표하여 총 업무 관할, 부계장은 회계와 서무 처리를 하며 계장 보좌, 고문은 계의 중요사항에 관한 회의 참여, 간사는 계장의 명을 받아 담당구역의 사무 처리, 조장은 간사를 보좌하여 조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었다. 애림계 역원은 “당국이 임명한 민중의 지도자”로서 지역민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되었다.<sup>68)</sup>

애림계는 국가적 임업 증진을 위해 당국의 통제 사항을 긴밀하게 지도, 감시 하면서 일반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주요 지도자인 애림계 역원은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계원 가택을 순회하고, 계원 가족을 대상으로 애림 사상을 지도했다. 임야 순시는 ‘계 사업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sup>69)</sup>이었던 것만큼 일상 생활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합법적’인 감시가 통용되었다.

애림계의 필수 지도 사항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단체적 각성을 통해 계 사업의 강화를 도모’함이 목적이었다.<sup>70)</sup> 즉 ‘부락’의 개인에게 공동 작업의 필요

66) 『경성일보』, 1939.12.12., 「愛林部를獨立」.

67) 忠淸北道淸州郡廳 編, 앞의 책, 43쪽(애림계규약준칙 제5조).

68) 忠淸北道淸州郡廳 編, 앞의 책, 43쪽(애림계규약준칙 제8~9조).

69) 忠淸北道淸州郡廳 編, 앞의 책, 33, 37쪽.

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의식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본 애림계의 지역민 관리는 산림 보호와 산림 단속으로 성격이 구분되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애림계의 필수 지도 사항

연번	지도 사항	보호	단속
1	임야 공동 순시		●
2	삼림 병충해 구제 및 예방		●
3	운통개량 및 검사		●
4	연료 소비 절약		●
5	임산연료 수급 조절		●
6	농용 임산물 증산	●	
7	계 지역의 미화 작업	●	
8	자급비료의 증산	●	
9	방화선 개설		●
10	삼림법령 엄수		●
11	삼림부산물 이용		●

첫 번째로, 산림 보호 명목의 지도 사항은 조선총독부의 정책 기조였던 임산물 생산, ‘부락’ 녹화, 산림 피해 예방이었다. 임산물 증산은 계원 공동의 목표로 상정해 계 지역 내 임야 산록, 휴한지에서 포플러, 아카시아 파종을 하게 하였다.<sup>71)</sup> 아울러 농가 생활필수품인 비료 증산을 긴요한 문제로 꼽으면서 퇴비(堆肥)와 녹비(綠肥) 재배를 강조했다. 퇴비와 녹비는 화학비료인 금비의 보완재로 장려되었는데,<sup>72)</sup> 계원의 자급자족을 통해 증산한다는 지도 사항으로 보아 식량

70) 당시 청주군의 애림계 지도방침과 애림계규약준칙, 애림계의 필수 지시 사항, 애림연합회 규약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 사례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애림계의 지도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忠淸北道淸州郡廳 編, 앞의 책, 1938).

71) 전쟁 상황에서 다량의 목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기엔 빠른 속도로 자라고, 번식력이 왕성하다는 특성이 있는 포플러 수급을 확대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松原瑞穂, 「ポプラ類増殖の急務」, 『朝鮮山林會報』 161, 1938.08, 34-38쪽).

72) 식민지 시기 비료는 금비(金肥), 퇴비, 녹비가 있는데, 이 중 화학비료인 ‘금비’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았으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보완재로 퇴비와 녹비를 장려했다(홍덕구, 「금비(金肥), 퇴비(堆肥), 녹비(綠肥) - 식민지시기 비료 담론의 과학적/사회경제학적/생태학적 전회」, 『상허학보』 68, 2023).

증산에 필수적인 비료비까지 농가에 부담시키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부락’의 녹화는 애림녹화운동으로, 계 지역의 미화 작업을 의미했다. ‘부락’ 주변이나 택지에 나무를 심고, 담장, 울타리에 살아 있는 수목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무는 상록수나 감, 호두, 밤의 과일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독부 대체 식량 증산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외 병충해 구제 및 예방, 방화선(防火線)을 개설<sup>73)</sup>하면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단속은 임야 순시를 비롯한 산림범죄 감시, 연료 소비 억제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 순시는 계 역원 회의에서 당번을 결정하고, 당번이 엄정하게 순시를 하도록 하였다. 당번은 순시 사항을 빠짐없이 간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그중 중대한 사항은 계장에게 보고하는 등 단속 방법을 세밀화 하였다. 아울러 삼림령 엄수를 주도하여 각종 산림범죄를 철저히 감시하였다.

연료 부족은 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늘 문제였다. 부족한 연료는 곧 산림범죄 증가로 직결되기에 전 사회적으로 치안을 불안케 하는 요소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축우 생사(生飼) 철저, 온돌 사용 제한, 연료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연료 문제에 있어서 농가 부녀자의 ‘과소비’를 절약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sup>74)</sup> 철저한 통제를 기반으로 삼았다.

아울러 연장선에서 임산연료 수급 조절을 지시하였다. 주요 사항은 ‘부락’을 단위로 공동이용의 방식을 강구한다는 취지 아래 임목 벌채, 하층민에 대한 공급책, 계 지역 외 연료 판매 제한, 대용연료 사용 등이 있었다. 계원의 벌채 수량

73) 방화선은 매년 10월에 계원을 총출동하여 개설하도록 하였다. 가을에 시행한 이유는 이 당시 대체로 늦은 가을이나 봄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제로 창원군에서는 경찰당국과 협력하여 군내 각 읍면에 임야경호단을 조직하여 보호 경비하였다. 단원은 만 15세 이상~40세 미만 남자로 구성되어 임야의 경비, 임야보호 및 녹화운동을 하도록 하였다(『동아일보』, 1937.12.03, 「資源育成코저 林野警護團 結成」).

74) 순천군은 1931부터 애림계가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쌍암리 애림계는 ‘부녀 애림계’로 부녀자 중심의 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조선의 애림 사상은 ‘아궁이 담당자(焚口役者)’인 부녀자로부터 철저한 점에서 첨단적인 장려 방침”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를 통해 부녀자들의 일상 생활 습관까지 감시하여 문제시하고, 개선하기를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부산일보』, 1931.09.09, 「여 교장도 열석해 순천의 애림회[愛林會] 회장 회담」; 『매일신보』, 1933.01.08, 「金産業課長 雙岩婦女愛林契視察」).

은 '부락' 호수를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계원 중 빈곤한 생활상태로 인해 연료 구입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력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료는 '부락' 단위로 수급하기 때문에 계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판매 불가 방침을 세웠으며, 농작물의 불필요한 찌꺼기를 이용하여 대용연료로 사용하도록 삼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계를 중심으로 공동 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관의 감시와 통제가 지역 말단까지 스며들었다. 이 모든 사항은 단체적 각성을 촉구함에 따라 공동 작업의 효율성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의 연대의식을 피력하며 '자발적으로' 책임지게 만들었다. 계 역원의 지도 사항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역민이 기존의 생활 태도를 부정하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3.3. 애림단체의 감시와 일상 통제 사례

애림 단체는 애림 사상을 선전, 보급한다는 명분 아래 지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당국의 산림 관리책과 그 관리 책무를 위임받은 애림 단체의 주요 대표자들은 일상을 엄중 감시하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졌다. 산림 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 하에 엄중 단속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안함이 증폭되었다.

일찍이 총독부는 산림감수소(山林監守所)를 설치하여 자유로운 벌채를 일체 금지시켰다. 산림감수소는 당시 동리 주민들이 경관 주재소보다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도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감수와 2~3명의 감수소원이 한 조를 구성해 늘 산림을 순시하였다. 감수가 도벌을 발견하게 되면 지계를 부수고, 낮·도끼 등을 압수하거나 이에 더해 구타까지 하면서 유치장 생활을 하게 하였다. 또 산림 순시뿐만 아니라 근처 촌가의 가택을 불시에 수색하면서 강압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놀다가도 감수가 나타나면 집으로 도망치기도 하였다.<sup>75)</sup> 이처럼 산림 감시가 삼엄해지면서 일반민들의 산림 접근이 불가능했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산림 관리자에 대한 이미지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총독부의 산림 단속은 농가 생활이 피폐해짐에 따라 빈곤한 생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일제로 청주군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이 솔잎을 굶어모아 시장

75) 『동아일보』, 1927.10.30., 「農村苦話 (九) 森林保護政策과 우리 現實生活」.

에서 팔며 하루 하루 살아나가다가 군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매일 40~50여 명씩 청주군에서 취조를 받았다. 대체로 과료 처분을 받았는데 벌금이 1~2원이었고, 당시 일반 민들에게 큰 부담이자 고통이었다.<sup>76)</sup>

이렇게 조선 전역의 각종 산림범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애림계를 비롯한 지도단체는 산림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책무가 생겼다. 지도의 외파를 쓴 감시는 사회 부조리 문제로 빚어지기도 했는데, 폭력을 동원한 형태로 발생하였다. 애림계원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의 산림 채취를 금지하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충북 청주군 사주면(四州面) 교동리(校東里)에 거주하던 이상만(李相萬)은 보은군 회남면(懷南面) 명암리(明岩里) 소재 산에서 땀감을 채취하다 발각되어 명암리 애림계장 곽응용(郭應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sup>77)</sup>

뿐만 아니라 애림계는 일반민들에게는 산림 접근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도 임야 채취물을 착복하여 본인들의 사적 이익으로 삼기도 했다. 전남 순천군 낙안면 이곡리(李谷里) 애림계에서는 도유림인 제석산(帝釋山), 동화산(桐華山)에서 보성군 벌교면민이 베어 온 시초와 고송지(枯松枝) 수백 짐을 강탈하여 비료,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낙안면 중흥리(中興里)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애림계원들은 연료 채벌 허가를 받아 채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가장을 보여달라고 하고, 작업을 방해하면서 베어 놓은 나무를 가져가기도 하였다.<sup>78)</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민들은 애림계에 대대적인 저항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있었다. 전남 영광군 무량면(畝良面)에서는 시초를 채벌하는 문제로 애림계원과 수십 명의 일반민이 대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광군 무량면의 풀밭에서 인근 장성군 삼계면(森溪面) 사람들과 함평군 월야면(月也面) 사람들 40여 명이 시초를 벌채하려 하자, 무량면 애림계원 50여 명이 곤봉을 들고 쫓아와서 제지함으로써 쌍방 100여 명이 대립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질 뻔하였다.<sup>79)</sup>

이렇듯 애림단체의 산림 '보호' 목적의 지도와 감시는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상 생활에 균열을 야기했고, 그 통제에는 강압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76) 『조선일보』, 1937.02.19., 「盜伐取締 嚴酷으로 細民 生活에 威脅」.

77) 『경성일보』, 1936.02.16., 「愛林稷長の暴行; 薪刈りに強制裁を加へ瀕死の重傷負はず」.

78) 『조선일보』, 1931.10.29., 「筏橋 愛林稷員이 無理橫暴를 敢行」.

79) 『동아일보』, 1936.06.04., 「百餘柴草群對立 格闘 刹那에 鎮撫」.

하였다. 이에 더해 일반민으로부터 강탈한 임야 채취물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으로 삼아 일반민들에게 더한 부담을 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애림 사상 선전과 이로 인한 일반민의 일상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독부가 애림 사상을 보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일상에서의 애림운동 확산과 기념식수를 통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 말단의 애림 사상 지도를 목적으로 조직된 애림 단체의 활동 양상과 그로 인한 통제상을 확인하였다.

먼저 총독부의 애림 사상 선전은 조선인들에게 기존의 산림 이용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산림 접근을 통제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도가 짙었다. 애림 사상은 1920년대 임야조사사업 시행 시기와 맞물리면서 보편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했다. 애림 사상 선전은 특히 민유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독부는 민유림 내에서의 적극적인 조림에 기반하여 산림녹화를 꾀하여 홍수 포함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총독부는 1930년대 조선공업화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산림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농가의 '자력갱생'을 표방하는 '애림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애림 사상은 '관민일치(官民一致)'에 따른 사회 연대의식을 고양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업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동력을 투입하게 하는 논리로 작동하였다. 나아가 중일전쟁 이후 군수물자 및 생산 확충 자재용 목재 수급이 증가하면서 총독부 차원의 산림 남벌이 진행되었다. 이는 민유림 조림사업 강화로 이어져 '부락' 중심의 애림운동이 가속화되어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림 사상은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양하게 하는 사회교화의 일환으로 당국의 통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되었던 것이다.

총독부는 1911년부터 '신무천황제일(神武天皇祭日)' 당일인 4월 3일에 기념식수를 공식화하며 산림 '보호'에 대한 의미를 본격적으로 선전하였다. 총독부는 선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문, 잡지 및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각 관공리, 학교 직원 및 학생 및 지역 유력자 등이 주도하여 실행하였다. 이때 애림 사상은 "치산치심(治山治心)의 근본"이기에 국민적 애림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함이 강조

되었다. 그러던 중 1936년을 기점으로 충청도에서 애립주간으로 확대하면서 1주일 간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1940년부터는 전 조선에 애립주간이 설정되었다. 총동원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식수는 보국이다”라는 표제를 걸고 관민을 총동원하여 행사에 동참시켰다. 이처럼 총독부의 애립 사상 선전은 실질적으로 총독부의 경제적 효용성 제고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선인들의 사상적 통제에서 기반되었다.

총독부의 애립 사상은 일반민의 “단체적 각성”을 촉구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총독부의 애립 사상 선전은 1930년대 들면서 마을 단위로 애립 단체가 조직되면서 면밀해진다. 특히 1933년 삼림조합을 대신하여 일반민에게 입업 지도와 관리를 하는 ‘충실한 실행자’로 ‘부락’ 중심의 애립 단체가 주목되었다. 당국은 지역 말단에서의 입업 지도를 전적으로 애립 단체에 일임하였고, 애립 단체는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락’ 민은 모두 애립 단체의 지도에 ‘동참하게’ 되고, 통제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애립 단체는 ‘부락’에 파고 들어가 ‘부락’민을 산림 ‘보호’의 주체로 각성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총독부는 애립 단체를 통해 해당 ‘부락’ 내 부족한 산림 자원은 그 ‘부락’민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애립 단체는 ‘애립’을 위시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단체적 각성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애립 사상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으로 내면화되면서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애립 단체의 지도 사항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락’민이 기존의 생활 태도를 부정하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애립 단체는 애립 사상을 선전, 보급한다는 명분 하에 지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산림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 하에 엄중 단속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안함이 증폭되었다. 애립 단체의 산림 ‘보호’ 목적의 지도와 감시는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상 생활에 균열을 야기했고, 그 통제는 강압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총독부의 산림 관리는 임산물 활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는 것이 늘 최우선이었다. 이때 애립 사상은 각종 비용과 노동력을 ‘자발적으로’ 동원하게 하는 통제 논리에 불과했다.

■ 참고문헌 ■

1. 자료

『森林保護講演集』

『朝鮮砂防事業令』

『朝鮮山林會報』

『朝鮮林業逸誌』

『朝鮮』

忠淸北道淸州郡廳 編, 『愛林之泉』, 1938.

『매일신보』·『조선일보』·『동아일보』·『경성일보』·『조선신문』·『부산일보』.

2. 논저

강영심, 「日帝의 한국삼림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일제의 森林組合 결성과 한국인의 저항」, 『한국근현대사연구』 8, 1998, 133-159쪽.

\_\_\_\_\_, 「日帝시기 戰時(1937년~1945년) 林政하에서의 삼림수탈」, 『한국사연구』 102, 1998, 261-290쪽.

강정원, 「일제의 山林法과 林野調査 연구: 경남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1930년대 일제의 조선공업화와 산림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79, 2016, 185-224쪽.

\_\_\_\_\_, 「일제 전시체제가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의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66, 2018, 123-174쪽.

박선영, 「1920~30년대 세궁민 생활상태조사와 구조 없는 구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6(4), 2023, 7-37쪽.

설주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사회교화사업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임송자, 「식민지 시기 땀감으로서 신탄과 연탄 이용의 변화 과정」, 『史林』 53, 2015, 203-238쪽.

정승진, 「과시증적 동원체제가 낳은 식민지 조합제도 - 조선(朝鮮) 계(契)와 회사(會社) 사이에서」, 『大東文化研究』 96, 2016, 145-164쪽.

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韓國史研究』 138, 2007, 177-215쪽.

\_\_\_\_\_, 「해방 직후~1960년대 초 산림계 설립논의의 전개와 그 성격」, 『史學研究』 90, 2008, 291-336쪽.

\_\_\_\_\_, 「일제강점기 연료용 임산물 생산·유통 통제와 그 변화」, 『대구사학』 119, 2015, 249-284쪽.

\_\_\_\_\_, 「일제하 목재 생산 정책의 성격과 그 변화」, 『전북사학』 48, 2016, 137-170쪽.

\_\_\_\_\_, 「조선후기 산림황폐화 현상과 일제 당국자의 산림 문제 인식 검토」, 『역사와 경계』 118, 2021, 47-77쪽.

홍덕구, 「금비(金肥), 퇴비(堆肥), 녹비(綠肥) - 식민지시기 비료 담론의 과학적/사회경제학적/생태학적 전회」, 『상허학보』 68, 2023, 547-580쪽.

산림청 편, 『조선임업사 (상)』, 산림청, 2000.

\_\_\_\_\_, 『조선임업사 (하)』, 산림청, 2001.

요하임 라트카우 저·서정일 역, 『나무시대: 숲과 나무의 문화사』, 자연과 생태, 2013.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2004.

□ Abstract

## The Promotion of 'Forest Cultivation(愛林)' Ideology and Daily Contro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Seon-Yeong

Traditionally, forests were vital assets that sustained people's daily live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However, Japanese imperialism sought to control the use of forest lands by Koreans and promoted 'Forest Cultivation(愛林)' Ideology under the guise of forest "protectio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ctively propagated Forest Cultivation(愛林) Ideology, particularly encouraging afforestation in privately-owned forests(民有林) to prevent deforestation. By the 1930s, this policy expanded into village-level Forest Nurturing Movements, reinforcing collective responsibility among civilians to encourage compliance with colonial control policies.

The promotion of Forest Cultivation(愛林) Ideology was carried out through newspapers, magazines, and radio broadcasts, with government officials, school staff and students, military police, defense unit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playing leading roles. The core objective of the Government-General's Forest Cultivation(愛林) Ideology was to induce a sense of "collective awakening" among civilians to prevent acts of forest destruction in advance. From the 1930s onward, as Forest Cultivation(愛林) Associations were organized at the village level, these propaganda activities became even more intensified. In particular, the leadership of these associations encouraged residents to deny their traditional way of life, leading them to engage in self-censorship. The strong guidance and surveillance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forest "protection" created a rigid atmosphere, disrupted daily life, and escalated into coercion and violence.

### [Key Words]

Forests, Forestry, Forest Cultivation(愛林), Commemorative Tree Planting, Forest Cultivation(愛林) Associations

## 박 선 영

---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천잠로 303 한지산업관 202호  
E-mail : shlsy241@jj.ac.kr

접수 일자: 2025. 02. 11.

심사 수정: 2025. 02. 27.

게재 결정: 2025. 03. 12.

---